

IFES

뉴스레터

2024년 6월호

IFES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IFES



**뉴스레터
21호(6월)
목차**

연구활동

1. 학술활동	03
2. 교수 연구활동	12
3. IFES 브리프	15
4. Fellowship 사업	18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19

연구소 소식

1. IFES 동정	27
2. 언론 속의 IFES	28
3. IFES 도서관	30
4. 예정사항	32
5. 안내사항	34

연구활동

학술활동

교수 연구활동

IFES 브리프

Fellowship 사업

북한·국제 정세 동향



1. 학술활동

가. 제8차 삼청포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5월 16일(목) 19:00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8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브루스 W. 베넷 선임연구원(美랜드연구소)이 “한국의 안보과제들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발표에서 “북한은 김정은의 유일한 성과인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가 방치한 사이 북한의 핵 개발이 가속화되었고, 김정은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면서 “북한의 미래 핵전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자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핵 보유가 필수조건”이고, “북한은 재래식 무기로는 대남 우위를 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침을 하는 경우에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독자 핵 보유와 관련해서 “핵비확산은 미국의 기본적 입장이며 △중국 등 주변국 반응 △한국 내 진보세력의 여론 저항 △원료(우라늄) 자급 등의 문제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한미가 추진할 수 있는 옵션으로써 “북한이 핵 동결을 하지 않으면 남한 내 핵무기 저장 시설 현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미 대북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으로써 “K-팝, K-드라마 등을 저장한 USB를 대량으로 북한지역에 살포하여 북한 주민 5%만 보급되어도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북한의 우수 대학원생들을 미국 대학에 초청, 해외문화 접촉 기회를 확대하는 등 대북 문화 공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를 마친 후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 대학원생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나. IFES-UNKS 공동포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와 북한대학원대(총장 양무진)는 5월21일(화) 14:00 ‘공동포럼’(북한대학원대 정산홀)을 개최했다. “한반도의 통일 담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공동 포럼은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세션 “한반도 통일: 담론과 실제”는 북한대학원대 출신들로 패널이 구성됐다. 박소혜 국회도서관 관장실 비서관과 박수유 채널A 기자의 발표와, 최종환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선임연구원, 이철 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이제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북한의 두 개 국가 선언 분석: 북한의 민족·통일 개념 변천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박소혜 비서관은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 남한을 포괄하는 ‘민족’이나 ‘통일’보다는 북한을 독자적으로 정의하는 ‘국가’라는 말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의 결과”라면서 “북한의 국가 목표 달성 이후 ‘통일’ 소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토론자인 최종환 선임연구원은 ‘남한 내 통일 담론의 형성 및 변천’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 가능한 통일정책 유지가 필요하며 온라인 공간에 익숙한 MZ세대와 통일 감수성을 잊지 않고 있는 탈북민·고령층을 상대로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철 선임연구위원은 ‘통일과 평화 담론’ 측면에서 “남북대화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지만 북한이 대화를 필요로 하고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유 기자는 ‘새로운 통일 구상 전망: 쟁점과 조건’에 대해 “현재의 통일 방안에 비핵화 연동 및 각 단계별 세분화된 평화적·단계적 방법론이 필요하며, 혈통적 한민족으로 한정됐던 민족 개념의 성격을 민족동질성이 아닌 민족공통성에 기반을 두고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무력통일 위험성’ 측면에서 토론한 김보미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남노선 전환과 계속되는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남북 대치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우발적 핵사용 가능성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제훈 선임기자는 “북한이 남과 북의 전면적 단절을 공개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분단사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돌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김정은 新노선 지속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제2세션 ‘한반도 정세 변화와 통일담론’은 역대 북한대학원대 총장 및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 교수 등 원로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남과 북 공존, 그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최완규 북한대학원대 4대 총장은 “북한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등장하면 과거처럼 남북관계는 정치대결의 장으로 회귀할 수 있다”면서 “남북한 간의 진정한 평화공존은 북한체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민순 북한대학원대 5~6대 총장(前외교부장관)은 ‘한반도의 안보구도와 핵 균형, 그리고 통일’ 측면에서 “통일정책 추진의 난관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세력균형의 주체가 ‘남과 북’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라는 모순된 현상 때문이며,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는 지금까지의 정책은 현실성과 타당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7~8대 총장(前주미대사)은 ‘2024 美대선 시나리오와 우리의 안보’에 대해 “트럼프 캠프의 최측근 간에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북핵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가 충분히 대비하여 중심을 잡고 리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과 남북관계’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9대 총장은 “북한의 대남 적대국 규정 및 위협 고조는 궁극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남북관계를 적대화하고 스스로 고립하는 ‘新쇄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핵화, 튼튼한 국방, 4자회담 등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연착륙시켜야 평화 정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前주일대사)는 “한국 외교전략의 출발은 남북관계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지켜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기반으로 일본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봉길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前주인도대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은 남한에 의한 일방적 흡수통일의 불안감 해소 목적으로 일단 공존하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면서 “현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해 남북한의 EU식 기능주의 통합방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前국립외교원장)는 “트럼프에게 ‘하노이 노딜’은 실패가 아니라 못다한 협상일 뿐이라며, 재선 시 북미회담 재개는 시기의 문제일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유연한 사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동포럼 2세션 사회를 맡은 이관세 소장은 “이번 포럼은 지난해 12월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등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한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 담론을 분석하고 새로운 통일담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년 11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철저한 대비와 함께 복합적인 요인들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 및 토론 주요내용

- **박소혜(국회도서관 관장실 비서관) 북한의 두 개 국가 선언 분석: 북한의 민족·통일 개념의 변천을 중심으로**
 - 북한의 체제 유지 위해 남한을 포괄하는 ‘민족’이나 ‘통일’보다는 북한을 독자적으로 정의하는 ‘국가’라는 말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의 결과
 - 북한의 국가목표 달성 이후 ‘통일’ 소환 가능성
- **최종환(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선임연구원) 남한 내 통일 담론의 형성 및 변천**
 - 미래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어
 -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 가능한 통일 정책을 유지해야
 - 온라인 공간에 익숙한 MZ 세대와 통일 감수성을 잊지 않고 있는 탈북민, 고령층을 상대로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적 교류가 필요함.
- **이철(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통일과 평화 담론: 평화 없는 통일, 통일 없는 평화**
 - 평화적 통일은 이제 더이상 불가능하며 군사적 방법에 의한 통일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시사
 - 남·북 대화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지만 북한이 대화를 필요로 하고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
 - 보수와 진보 누구나 공감하는 평화와 통일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기반하여 지속적인 통일정책을 추구하여야 하며, 평화 구축을 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적극 추진하는 것도 필요
- **박수유(채널A 기자): 2024 새로운 통일방안 전망: 쟁점과 조건**
 - 기존 통일방안에 비핵화 연동 및 각 단계 세분화된 평화적·단계적 방법론 필요
 - 혈통적 한민족으로 한정됐던 민족 개념의 성격을 민족동질성이 아닌 민족공통성에 기반을 두고 새롭게 규정해야
 - 통일방안에 남북관계 특성에 맞는 경제통합 방안 포함되어야
- **김보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핵무력 고도화와 무력통일 위험성**
 - 대남노선 전환과 계속되는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하지만 남북 대치국면 지속으로 우발적 핵사용 가능성 상승
- **이제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남과 북: 두 개의 주권국가와 통일지향 특수관계의 길항**
 - 남과 북의 전면적 단절을 공개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분단사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돌출 상황’
 - 김정은 新노선의 지속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어

• **최완규(북한대학원대 4대 총장): 남과 북 공존, 그 한계와 가능성**

- 북한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등장하면 과거처럼 다시 남북관계는 정치대결의 장으로 회귀할 수 있음.
- 북한체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남북한 간의 진정한 평화공존 가능
- 남북한 간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체제는 동북아에서 북중러와 한미일이 매우 유연한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가능할 것임.

• **송민순(북한대학원대 5~6대 총장, 前외교부장관) 한반도의 안보구도와 핵 균형, 그리고 통일**

- 통일정책 추진의 난관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세력균형의 주체가 ‘남과 북’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라는 모순된 현상 때문임.
-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는 지금까지의 정책(적극적 평화구축 시도)은 현실성과 타당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하며, 미국 정권 형태 변화에 좌우되기 보다는 한국이 자체의 기본 입장을 견고히 해야 함.
- 잠재적 수준에서나마 남과 북의 핵균형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안보구조의 정상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안호영(북한대학원대 7~8대 총장, 前주미대사) 2024 美대선 시나리오와 우리의 안보**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의 여파와 이에 대한 대비가 한국을 비롯 많은 국가의 관심 사항
- 트럼프 캠프의 최측근 간에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중간단계, 북핵인정 등)가 나온다는 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며 한국 입장에서는 중심을 잡고 리드해나가야 할 분야임.
- 종합적으로 정책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대응책 마련과 함께 미국 행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킹 확대라는 대비가 필요함.

• **양무진(북한대학원대 9대 총장) 북한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과 남북관계**

- 대남 적대국 규정 및 위협 고조는 궁극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며, 체제유지를 위해 남북관계를 적대화하고 스스로 고립하는 ‘新새국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 동서독의 사례를 참조하여 북한의 두 국가성에 동조해서는 안되며, 북한의 대남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접촉을 통한 평화’, ‘평화공존책’을 지속해야 함.
- 비핵화·튼튼한 국방·4자회담 등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연착륙 시켜야 평화 정착이 가능할 것임.

• **강인덕(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前통일부장관)**

-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파워(힘)를 구축하고 깨어진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함.

- 지금은 북한의 핵을 어떻게 억제하고 없애느냐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해 자주보다도 평화의 원칙을 더 앞세워야 하는 상황
- 통일방안에 집착하기보다 주변국과 연대해 북한의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을 완화시킬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북한의 문을 열 방안 모색 필요

• 이수훈(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前주일대사)

- 한국의 외교전략의 출발은 북한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남북관계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지켜야 함.
- 한국의 외교전략의 출발점이 한미동맹 강화나 한일관계 또는 한중관계 개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며, 성숙한 한일관계를 기반으로 일본의 협력을 유도해야 함. (일본의 중요성 강조하였음.)

• 신봉길(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 한국외교협회 회장, 前주인도 대사)

- 북한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은 남한에 의한 일방적 흡수통일의 불안감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존하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임.
- 공존은 인내를 가지고 교류를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제재·대립 속에서도 교류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됨.
- 현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하여 남북한의 EU식 기능주의 통합방안 추진이 필요함.

•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前국립외교원장)

-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정책이 예상되며 이 핵심은 이민 제한, 제조업 재건, 해외개입 축소 등 세 가지로 집약됨.
- 우리와 연계된 해외개입 축소는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북핵·북한 문제’이며, MAGA 의제 중 가장 예측과 대응이 어려움.
- 트럼프에게 ‘하노이 노딜’은 실패가 아니라 못다한 협상이며, 2019년 6월 판문점 깜짝 회동 직후 나왔던 “잠정협정”이 회담 재개의 기초가 될 수 있음. 트럼프 재선 시 북미회담 재개는 시기의 문제일 것임.
-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북핵 등 세 개 주제가 얽혀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것임.

※ 상기 자료는 발표 및 토론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전문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다. 노르웨이 갈등해결센터(Center for Conflict Resolution-NOREF) 방문단 간담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5월 23일(목) 10:30 평화관 1층 소회의실에서 스베인 새터(Svein Saether) 노르웨이 갈등해결센터(Center for Conflict Resolution-NOREF) 특별고문(前주중 노르웨이 대사) 일행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동 간담회에는 스베인 새터 특별고문, 잉거브로그 핀박(Ingebjrg Finnbakk) 노르웨이 갈등해결센터 자문관과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내부 동향 변화 △북-러간의 군사, 경제협력 동향 △2024.11 월 대선 결과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향후 북한 대외 관계 확대 가능성과 전망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1. 학술활동

라.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원(SIIS) 방문단 간담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5월 28일(화) 10:30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리카이성(Li Kaisheng)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일행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동 간담회에는 리카이성(Li Kaisheng) 부원장, 차이량(Cai Liang) 동북아연구센터 소장, 공커위(Gong Keyu)·천요준(Chen Youjun) 주임, 리닝(Li Ning), 조성성(Zhou Shengsheng) 부연구위원과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관세 소장은 △미중 경쟁상황의 지속으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문제 △한국이 직면한 새로운 안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기대 △학술정보, 문화교류 등 MZ세대 간의 교류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고, 리카이성 부원장은 △한중관계 관련 서로 간 공동 이익을 찾는 글로벌협력 필요성 △최근 나타난 북한의 동향에 대한 분석 △한중 협력이 강화될 미래세대에 한국의 역할 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양 기관은 싱크탱크로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마.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 방문단 간담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5월 29일(수) 10:30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쓰소우린(史守林)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일행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동 간담회에는 쓰소우린(史守林) 부원장, 리쉐(李雪) 국제협력처장, 진메이화(金美花) 동북아연구센터 비서장, 양쉐핑(楊學峰) 러시아연구소장, 왕휘(王暉) 조선한국연구소장과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이상만·조진구·이형중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구갑우·유영수·김성경 북한대학원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대학원대 및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역할과 주요 연구 분야 소개 △길림성 사회과학원 연구 성과와 중점 연구 분야 소개 △한중 협력방안 모색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3개 기관은 싱크탱크로서 ‘안정적인 한반도’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학술적으로 교류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2. 교수 연구활동

가. 학술활동

임을출 교수

1. 평화문제연구소(통일문제연구 제36권 1호, 2024년 상반기) 논문 게재
- 일자: 2024. 5. 30.(목)
- 제목: '9·13 김정은-푸틴 정상회담'의 전략적 함의: 북한측 시각을 중심으로
2. 평화나눔연구소 창립 9주년 기념세미나 발표
- 일자/장소: 2024. 5. 3.(금) / 천주교 서울대교구 501호
- 내용: 한반도 화해와 일치를 위한 교회의 역할
3. 장로회신학대학 통일선교대학원 특강
- 일자/장소: 2024. 5. 7.(화) / 장로회신학대학교 소양관 507호
- 내용: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제협력
4.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제26회 통일법 포럼 토론
- 일자/장소: 2024. 5. 10.(금) /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D회의실
- 내용: 북한의 부동산제도와 통합방향

김상범 교수

1.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소-한국냉전학회 공동 학술대회 발표
- 일자/장소: 2024. 5. 10.(금) / 강원대학교
- 내용: '북한의 두 개 국가 선언의 평가 및 전망'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1. 아산정책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참석
- 일자/장소: 2024. 5. 14.(화) / 그랜드 하얏트 호텔
- 내용: 자신감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의견 제시
2. 크리스 밀러 前미국 국방장관 토론
- 일시: 2024. 5. 28(화) / 최중현 연구소
- 내용: 트럼프 재선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의견교환

3. 『한반도 평화 만들기』 토론회 참석

- 일자/장소: 2024. 5. 29(수) / 롯데 호텔 아스토 스위트
- 내용: 한일중 정상회의 내용 등 경제 통상 이슈에 대한 유의점 토론

전령현 초빙교수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통일법 강좌 특강
 - 일자: 2024. 5. 30.(목)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내용: 중국의 일국양제 (홍콩특별행정구를 중심으로)

나. 저술활동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제 목: 트럼프의 귀환: 위기인가 기회인가
저 자: 조병제 지음
출간일: 2024년 5월 30일
펴낸곳: 월요일의 꿈
쪽 수: 299쪽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영국 서섹스대학 석사 학위 취득,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1년 외교부에 들어간 후 북미국장,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외교부 대변인, 주미얀마 대사과 주말레이시아 대사를 지냈고, 국립외교원장을 마지막으로 외교부를 떠났다.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 교수이며,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 목 차 >

1부: 트럼프의 성장과 성격

- 1장 출생과 성장
- 2장 트럼프의 성격

2부: 트럼프의 정치

- 1장 진영정치
- 2장 아메리카 퍼스트
- 3장 트럼프와 공화당
- 4장 위기와 탄핵의 백악관 4년

3부: 재집권을 향한 도전

- 1장 재집권 로드맵
- 2장 진영 플러스알파
- 3장 아메리카 퍼스트 2.0

2. 교수 연구활동

다. 언론활동

임을출 교수

1. KBS '남북의 창' 출연
- 일자 : 2024. 5. 4.(토)
- 내용 : (이슈&한반도) "경제 전반 붕괴"..."강화된 통제"
2. 연합뉴스TV '한반도 브리핑' 인터뷰
- 일자 : 2024. 5. 25.(토)
- 내용 : '사춘기' 김정은 체제 정체성 혼란?...러시아-미국 핵 만지작
3. MBN '7시 뉴스' 인터뷰
- 일자 : 2024. 5. 25.(토)
- 내용 : 김정일 극진히 대접했던 김연자...김정은은 "듣지도 부르지도 마"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1. 한국일보 『안호영의 실사구시』 기고
- 일자: 2024. 5. 6.(월)
- 내용: "북한 비핵화 자신감 갖고 대응하자" 제하, 북한의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좌절감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응해야 할 시기
2.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 기고
- 일자: 2024. 5. 15.(수)
- 내용: "North Korea's Nuclear Threat: why we must stay the course" 제하, 북한의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좌절감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응해야 할 시기

최영준 초빙교수

1. 세계일보 인터뷰
- 일자: 2024. 5. 7.(화)
- 내용: "자유민주주의로 통일" 명시 성과, 대북정책 실종, 남북관계 단절은 한계

3. IFES 브리프

IFES 브리프(요약)

트럼프 재집권 시의 한미관계

(2024. 5. 8. 안호영 경남대 초빙석좌교수, 前주미대사)

2024년 美대선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는 사실을 넘어 미국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선거이다. 미국의 많은 정치 역사학자들은 트럼프 前대통령이 재선되면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권위주의적 대통령의 시대(a new kind of authoritarian presidential order)를 맞게 될 것이고,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는 2016년에 비하여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훨씬 본격화된 시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1기 때처럼 전통적인 미국의 국제적 지도력에 무관심하고 동맹을 경시할 경우 이것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상되는 한미관계의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먼저 안보적 측면에서 제1기 집권 시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수시로 제기한 것처럼 한미 양국 간에 이슈화될 것이고, 주한미군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분담금을 대폭 증액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 핵 미사일 개발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캠프의 최측근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워싱턴선언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조치로는 불충분하다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엘브리지 콜비), 다른 한편으로 “워싱턴선언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조치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로버트 오브라이언)하는 등 北 핵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중심을 잡고 리드해 나가야 할 분야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자 협력과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경시하는 점, 그리고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미 중 간 관세 전쟁이 확산될 경우 국제 무역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중장기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재집권 시 산업 정책의 집행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질지에 따라 우리나라 배터리, 전기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예상되는 한미관계의 주요 과제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 前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심도 있는 연구 및 대응책 마련과 함께 미국 조야의 정책 결정자(행정부에서 일할 예상되는 인사들, 상 하원 의원)는 물론 싱크 탱크(Think Tank) 언론 등 여론 형성자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네트워킹 확대와 유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IFES 브리프(요약)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와 일본

(2024. 5. 29.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과 팬데믹 대응,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부속문서들이 채택되었다. 공동선언은 한·일·중 세 나라가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 및 정례화 △인적 교류 및 경제협력 등 강화 △3국 협력의 외연 확장을 위한 ‘한일중 + X 협력’ 추진 등 3가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2025~2026년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인적 교류 4천만 명까지 확대와 2019년부터 중단 상태인 3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교섭 가속화 등에도 합의하였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나아가 북한이 이날 예고한 위성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윤 대통령)과 강력한 중지를 촉구(기시다 총리)했지만, 리창 총리는 사태 악화 예방을 위한 관련국의 자제를 언급해 온도 차를 보였다.

2023년 11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하고도 6개월이 지나서 열린 것은 중국의 소극적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 크며, 5월 13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조만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 한일관계가 개선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이 중국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질서나 대만 문제, 북핵 등 안보 문제를 둘러싼 한일과 중국 간 인식 차이가 크므로 이것이 경제, 환경, 사회문화, 인적 교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일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 발전에 합의했으나 양국 정상의 의지를 뒷받침할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이 취약한 상황으로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IFES 브리프(요약)

미완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평가와 전망:
중국의 전략적 대응

(2024. 5. 31.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제9차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분석해보면 한중일의 시각차가 매우 크다. 중국은 3국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비전통 안보 분야인 기후 변화, 공중보건, 에너지 안보 분야 협력에 매우 적극적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중일 협력을美주도의 탈중국화, 탈동조화, 디리스크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한중일 경제협력과 비전통 안보 분야의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또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중일 3국이 도출한 가장 구체적인 회의 성과 분야는 인문교류이다. 향후 인문교류가 활성화 되면 한중일 국민간의 정서도 긍정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통해 3국간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고, 경제협력을 통해 3국의 민생문제도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 현안문제도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이다.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 평가와 전망을 해보면 첫째) 미중간 전략경쟁 가속화와 동북아지역의 신냉전 상황 도래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중일 3국간 대화와 소통채널을 복원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한중일 3국 모두 치열한 미중 경쟁의 가시화와 북한발 한반도 안보불안이라는 공통의 정치 외교 안보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3국간의 입장과 전략에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은 실질적인 한중일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본다.

둘째) 공동선언에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지만 경제와 비전통 안보 분야에 집중되었고, 향후 합의한 내용이 실제 협력으로 진전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다만, 한중일 3국이 4년 반 만에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재개했다는 그 자체에 의미가 매우 크다.

셋째) 한중관계는 사드사태 이후 위축되었던 경제통상, 문화 및 관광 등 분야에서 교류가 재개될 수 있는 출로를 열어 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 반면 한중일 3국이 각각 중요하게 상정한 쟁점과 현안(대만문제, 북한비핵화, 납치문제) 문제는 합의하지 못한 채 각자의 주장을 병립하는 선에서 타협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대해서 원론 수준의 해법을 제시하고 소극적으로 임한 것은 중국의 6대 국가 핵심이익 보호와 관련성이 있다. 중국은 일괄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국가이익과 맞아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비전통 안보 문제에 자신감을 가지고 회담에 임한 것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에 당사국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었다고 본다.

4. Fellowship 사업

2024년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3차 오리엔테이션 실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5월 23일(목) 14:00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3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3차 오리엔테이션에는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실무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中 양향봉(Yang Xiangfeng, 링난대학 조교수)과 日 호리야마 아키코(Horiyama Akiko, 마이니치신문 기자) 펠로를 대상으로 △펠로우십 사업 취지 및 과정 소개 △주요 지원 사항 안내 △소내 외 시설 탐방 △질의 응답 등을 진행했다.

한편, 이관세 소장은 펠로들을 대상으로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연구에 정진하여 좋은 성과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동 펠로들은 2024년 5월부터 6개월간 △2018년 이후로 중국-북한 간 관계와 미주도의 중심-톱니바퀴 시스템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양향봉 펠로)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 모색과 북한 인권정책에서의 한일제휴 가능성에 대한 분석(호리야마 아키코 펠로) 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中 양향봉 펠로 >



< 日 호리야마 아키코 펠로 >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북한

- **북한 대외경제상 이란 방문, 이란 국영 완성차 회사 ‘사이파’와 “협력할 준비 돼 있다” (5.7. 연합뉴스)**
 -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 "양국의 우호적인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면 양국이 자동차산업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
- **5.7.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 축하 김정은 친서 (5.8.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5.7. 김기남 전 선전선동 담당 비서 사망, 김정은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 (5.8.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5.10. 김정은, ‘갱신형 240mm 방사포무기체계’ 요해 및 조종방사포탄 시험사격 참관 (5.11.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갱신형방사포무기에는 자동사격종합지휘체계가 도입되었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에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교체장비”
- **5.11., 5.12., 김정은, 중요국방기업소들 현지지도 (5.13.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들 현지지도
- **5.14. 김정은, 미사일연합부대 실전배치용 전술미사일무기체계 요해 (5.15.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들에서 올해 상반기도 군수생산 계획 수행, 연말까지 전술 미사일무기체계 생산계획 마무리
- **5.15. 김정은, 완공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현지지도 (5.16.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5.20.~5.24.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 대표단 방북(5.21., 5.24., 5.25.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5.21. 중앙간부학교 준공식, 김정은 참석 및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 강조 연설 (5.25.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연설,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 강조
 -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초상화 나란히 배열, 레닌 초상화 공개
- **5.27. 외무성, ‘한일중 3자 정상회담’ 공동선언 비난 대변인 담화 (5.27. 조선중앙통신)**
 - (비핵화 요구) “가장 적대적관계에 있는 한국이 우리의 주권적권리를 부정하고 위헌행위를 강요하려드는것이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추호도 묵과할수 없는 모독이며 선전포고”
- **5.27.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보도 (5.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5.27.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에 탑재하여 발사하였으나 1계단(단계) 비행 중 공중 폭발하여 실패했다고 보도
- **5.28. 김정은, 국방과학원 창립 60주년 기념 축하방문 및 연설 (5.29.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북한 정찰위성발사 예고에 대응한 한국 공군의 훈련을 북한에 대한 “정면도전”, “도발행위”, “국권침해행위” 등으로 비난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미국/일본

- **미 정보수장 “중러, 타이완 겨냥 협력…미중·미러 두 전선도 가능” (5.3. KBS)**
 -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현지 시각 2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 선택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군사, 기술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중러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언
- **미·일·호주 국방장관 공동성명…“북·러 군사협력 증가 강력 규탄” (5.4. KBS)**
 -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획득, 북한산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공격”을 지적
- **미·필리핀 합동훈련…타이완 탈환·중국산 선박 침몰 훈련 (5.8. KBS)**
 - 처음으로 필리핀 영해 밖에서 실시, 중국 반발
- **한미일 대북협상대표 도쿄 회동 “북·러 군사협력 심화 맞서 결의 강조” (5.10. KBS)**
 - 3국 대표 “3국 간 긴밀 협력 유지... 납북자·북한내 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즉각 해결 필요” 강조

중국/러시아

- **북중 ‘신압록강대교’ 오는 10월 1일 공식 가동 예정 (5.1. 뉴시스)**
 - 중국 랴오닝성 단둥 ~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개통 예정
 - 북한 남신의주에 세관 건설 중이며 9월 말 신압록강대교 개통식 예정
- **5.16. 러시아 푸틴, 중국 국민방문 및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5.16. 연합뉴스)**
 - 러·중 정상회담 중 역대 최대규모이며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 논의
 - 금융·에너지·철도 포함 경제·산업계 주요 인사 대규모 동행
- **5.20. 러시아, 오는 7월 파리 올림픽 기간, 우크라이나와 올림픽 휴전 고려 (5.20. 서울신문)**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러시아에게만 유리한 조처라며 휴전안 거부
- **5.23. 중국군, 대만 포위 훈련 (5.23. 연합뉴스)**
 -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 사흘 만에 양일간 육·해·공·로켓군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 대만독립 분리세력에 대한 중국의 엄중한 경고적 성격
- **5.26.-27. 한중일 3국 정상회의, (5.23. 연합뉴스)**
 - 4년 5개월 만의 개최, 한미일 3각 협력 체계 제도화·정례화
 - 한반도 비핵화 공동목표 언급,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 지정

■ 해외 전문가 논평

〈특집〉 주한미군 철수 논쟁

■ Elbridge A. Colby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

"미군 韓주둔 불필요...인질로 뒀선 안돼" (연합뉴스, 5.8.)

-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아. 미국은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힘을 보존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경우에만 한국을 지원해야 함.
- 주한미군의 주 임무를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미군의 상대적인 약화라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미국이 한국을 버려야 하는 건 아님.
-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군은 한국에 대한 직접 공격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하므로 미국이 한국에게 대만 방어에 직접 참여하라고 요청해서는 안 됨. 또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훨씬 선호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는 않음.

■ David Maxwell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소장, 글로벌피스재단 선임연구위원): "한미동맹 방기가 전쟁을 막지는 못할 것" (The National Interest, 5.15.)

- 미국은 한국, 대만 모두의 방어를 지원해야만 한다. 중국과 북한은 동맹이며 둘 사이의 협력은 강화되고 있으니(러시아 또한 마찬가지), 미국의 대중 전선과 대북 전선을 분리해서 계산하는 것은 착오
- 공개적으로 한국보다 대만을 우선시하면 동맹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이며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게 됨. 또한, 한미동맹을 갈라놓으려는 김정은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
- 왜 김정은에게 주한미군 철수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가? 대만 방어를 포기한다고 해서 미국 도시들이 중국의 핵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지지 않듯이, 미국은 모든 핵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함. 한국과 대만 중 한쪽만을 방어한다면 결국 둘 다 잃게 될 것임.

■ Elbridge A. Colby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 "주한미군? 한국 핵무장?...돈 없어진 미국, 솔직해져야" (KBS, 5.18.)

-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배치돼야 함. 다만, 미국은 (매우 가공할 만한 군사력을 보유한) 북한과 큰 충돌에 휘말릴 여유가 없어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돼야 하며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단계에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매우 강력한 군사력과 방위산업을 갖고 있는 한국이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적은 확실히 좋은 조언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움직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상대로 움직여 미국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고갈시킨 뒤, 중국이 미국에 도전할 것
- 북한 비핵화는 지금은 터무니 없는 기대, 불합리한 전제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는건 실책임.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 제한이 더 달성 가능한 목표일 수 있음.

■ **Denny Roy (East-West Center 선임연구위원): “한미동맹에 대한 엘브리지 콜비의 생각은 틀렸다” (The National Interest, 5.23.)**

- 주한미군은 이미 필요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 될 수 있으므로 주한미군 전체를 철수하는 것은 불필요
- 대만 방어가 한국 방어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은 틀림. 물론 대만도 미국에게 경제, 전략, 정치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지만, 한국을 잃는 것 또한 미국의 국제 이익에 막대한 손해가 될 것임.
- 주한미군이 북한만을 상대하고 있다는 콜비의 분석은 정세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해석한 것임. 주한미군 철수는 북중러 연합이 깊어져 한미 협력이 가장 절실한 때에 동맹을 해체하는 것임. 또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용인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는커녕 늘리는 처사임.

〈특집〉 트럼프 재선 시 동아시아 및 국제 정세 예측

■ **Timo Kivimäki (영국 바스대학교 교수):**

“트럼프 2기 집권 시 미북 관계 전망” (The National Interest, 4.29.)

- 트럼프 재선 성공 시 북한과 더 많은 협상이 이루어질 것.
- 트럼프는 바이든(혹은 다른 기존 대통령들)과 달리 이념 지향적인 정치인이 아니므로 미국의 이해방식과 이념을 타국에 강요하지 않고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를 존중해 협상 개시에 유리

■ **Ralph A. Cossa (퍼시픽포럼 석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북한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 (The National Interest, 5.13.)**

- 트럼프에게 이미 한두 번 실망한 김정은은 대화 재개에 의욕적이지 않을 것. 사실 김정은은 트럼프로부터 원하던 국제적 정당성(international legitimacy)을 이미 가지고 있음.

- 북한 외교사를 살펴보면 소련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 타는 전략을 구사
- 소련 붕괴 이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으나, 이제는 다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양상으로 회귀
- 반면, 대통령이 누구든, 미국의 국가 이익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문서들이 기존 정부들에서 생산된 것들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

■ Allison Hooker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선임 국장): “트럼프, 북한 문제 해결 원할 것” (CSIS, 5.16.)

-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지 미지수
- 트럼프 재집권 시 북미 간 최소한 소통의 재개는 가능할 것
- 트럼프는 김정은이 먼저 문을 두드려주길 원할 것임.

■ John Bolton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는 한미동맹을 모른다…거래의 대상일 뿐” (KBS, 5.20.)

- 트럼프는 한미상호방위협력에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음.
- 트럼프는 미국 정치의 일탈자이며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동맹·우방과 신뢰 유지 매우 어려움.
- 4년 전보다 북한은 훨씬 강력한 협상 위치에 서 있지만 트럼프의 관심사는 ‘평양 방문 최초 미국 대통령’이라는 언론의 관심만 원할 것임.
- 북한으로부터 직면한 위협을 고려할 때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도입할 필요

■ Julie Turner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트럼프 와도 대북 인권정책 유지될 것…정보유입 새 방안 고민” (KBS, 5.22.)

-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북한 주민 인권을 개선하는 현재의 미국 정책이 유지될 것
- 코로나 19 전후로 강화된 북한 내부통제에도 북한 내부로의 외부정보 유입 통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
- 북한의 반동문화사상배격법 등의 사상통제법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적인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이자 그에 대한 반작용

연구소 소식

IFES 동정

언론 속의 IFES

IFES 도서관

예정사항

안내사항



1. IFES 동정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외국인 학생단 방문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최용 지도교수와 외국인 학생단 39명이 5월 20일(월) 15:3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는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등이 함께 하였고, △기념 촬영(잔디 광장) △IFES-UNKS 홍보 동영상 시청(영문) △도서관 특수자료실 등을 견학하였다.

외국인 학생들은 김정 교수와의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문제 △남북관계 상황 △북한 현황 △북한의 핵개발과 한국의 핵무장 등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도서관 특수자료실 견학을 통하여 다양한 북한 원전 자료를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양대학교 최용 지도교수는 “북한과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이고 흥미로운 견학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 언론 속의 IFES

『IFES-UNKS 공동 포럼』 개최 보도 (2024. 5. 21.)

연합뉴스, 뉴스1, 경남신문, 매일경제, CNB뉴스, 서울평양뉴스 등 14개 국내 언론사에서 『IFES-UNKS 공동 포럼』 개최 내용을 보도했다.

“北 ‘2국가론’ 속 통일정책 미래는… 외교안보 원로들 토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으로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고, 비핵화의 가능성은 멀어지는 등 여러 도전에 처한 대북·통일정책의 앞날을 놓고 외교·남북관계 분야 원로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가 21일 오후 북한대학원대 정산홀에서 '한반도의 통일 담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 포럼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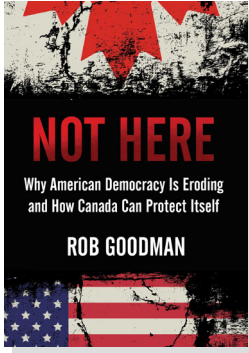
역대 북한대학원대 총장들이 발표자로 나서고,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전직 당국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국내언론 보도 현황

연번	분류	보도일자	언론사명	기사 제목	비고
1	통신사	5월 21일	연합뉴스	北 '2국가론' 속 통일정책 미래는...외교안보 원로들 토론	
2		5월 21일	SPN 서울평양뉴스	"핵 능력 갖춰 한반도 안보 구조 '북-미 균형'에서 '남-북 균형'으로 전환해야"	
3		5월 22일	SPN 서울평양뉴스	[리뷰] 北 '투 코리아'... '통일' 부활 가능할까? 우리의 통일 담론은?	
4		5월 23일	SPN 서울평양뉴스	[리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변환... 우리의 대응 방점은?	
5		5월 21일	CNB뉴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 공동 포럼 개최	
6		5월 21일	부울경CNB뉴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 공동 포럼 개최	
7		5월 21일	뉴스1	"北의 남한 '적대국' 규정은 궁극적으로 미국 겨냥...남남 갈등 유발 의도"	
8		5월 21일	뉴스프리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FES-UNKS 공동 포럼' 개최	
9		5월 21일	아시아경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FES-UNKS 공동 포럼' 개최	
10		5월 21일	이뉴스투데이	경남대, '한반도의 통일 담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공동 포럼 개최	
11		5월 21일	쿠키뉴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FES-UNKS 공동 포럼' 개최	
12		5월 21일	한국공보뉴스	한반도의 통일 담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IFES-UNKS 공동 포럼』 개최	
13	일간지	5월 21일	경남신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와 공동포럼 개최	
14		5월 22일	매일경제	北 '2국가론' 속 통일정책 미래는...외교안보 원로들 토론	
15	기타	5월 21일	베리타스알파	경남대 'IFES-UNKS 공동 포럼' 개최	
16		5월 21일	대학저널	경남대, 'IFES-UNKS 공동 포럼' 개최	

3. IFES 도서관

가. 추천도서



제 목: NOT HERE: Why American Democracy Is Eroding and How Canada Can Protect Itself

(미국 민주주의가 침식되는 이유와 캐나다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저 자: 롭 굿맨 (Rob Goodman)

출간일: 2023년 8월 15일

출판사: 사이먼 앤 슈스터(Simon & Schuster)

쪽 수: 272쪽

2022년 중반에 캐나다-한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회의에서 한국의 저명한 한 학자는 "한국인들이 캐나다를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가 한국에서의 홍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 또한 그에 동의한다. 캐나다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스스로를 알리는 데 소홀했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과 같지 않다. 캐나다가 그 남쪽 이웃과 다르듯이, 민주주의 제도 또한 상이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미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관계의 복잡성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 캐나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동안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이유와 캐나다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롭 굿맨이 그의 저서 'Not Here'에서 탐구한 문제의 핵심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쇠퇴 추세는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도 대비해야 할 문제이다.

굿맨의 말처럼 캐나다는 "캐나다가 사라질 가능성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가 보기에 캐나다의 미래는 "미국으로부터의 정신적 독립"에 달려 있으며, 이는 "이웃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선택, 즉 우리의 차이를 정의하고 유지하는 선택, 즉 거부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굿맨은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권위주의가 부상하는 시대에 "캐나다의 민주주의는 차이와 차별성을 주장하는 '거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유대계 미국인인 굿맨은 전직 미국 의회 직원이자 연설문 작가로 현재 토론토에 거주하며 강의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미국의 민주주의 쇠퇴를 직접 목격했다. 과거 미국에서의 생활과 캐나다에서의 가족 경험은 국가적 고정관념, 캐나다 건국, 미국의 '진짜 국민 원칙', 심지어 퀘벡 민족주의에 대한 그의 반감과 감성에 영향을 주어 그의 강한 논리에 감정적 연결성을 더한다.

굿맨은 캐나다의 재건이 미국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었던 것은 캐나다가 '진짜 국민'이라는 개념을 비워 냈기 때문이며, 캐나다의 다양성과 화해('다시 힘을 합친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를 추구하는 능력이 나라 안팎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캐나다 민주주의의 강력한 방어'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굿맨은 캐나다를 여전히 '여기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상상 속의 공동체'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캐나다인들이 깨어나서 대답하기 시작해야 하는 질문이며, '지반이 우리 발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데도 우리 자신을 미국으로 이미지화하려는 생각 없는 경향으로 인한 분열'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침식 사례'로 여겨지는 권위주의의 길로 접어들면서 '스스로를 다시 세우기 위해 힘겹게 고군분투'하고 있다. 굿맨은 '캐나다와 캐나다의 역사 및 정치 문화를 차별화하는 요소인 캐나다 지방주의'를 자국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방어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방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굿맨의 말처럼 이 과제는 파트너 없이는 글로벌한 맥락에서 달성할 수 없다. '캐나다의 민주주의가 약한 것은 다른 곳,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가 약하기 때문이다.' 굿맨은 캐나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캐나다에서 무엇을 원하든, '미국 압력이 세계에서 강력하고 성장하는 힘을 나타내는 한' 캐나다 국경 너머에서 오는 과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압력이 계속해서 캐나다를 압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캐나다의 민주주의가 전적으로 캐나다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견국으로서 캐나다는 파트너들, 즉 다른 중견국들과 함께 특별한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캐나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서 국제적으로 민주주의 수호를 지원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국내 민주주의를 보호할 계획이 없다면 캐나다의 도덕적 행동은 '해외 강대국 갈등이 국내 민주주의를 교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열어두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굿맨이 지적했듯이, 캐나다는 '타인에 의해 눈에 띄게 구축된' 글로벌 구조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국제 정치에서의 삶은 긴 제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민주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그 연원, 정체성, 미국과의 관계 측면에서 볼 때 캐나다와 한국의 경험은 비슷하지 않으며 비교할 수도 없다. 한국에는 한국만의 장소, 민족주의, 그리고 국민에 의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쟁취한 스토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이 캐나다와 공유하는 것은 미국과의 파트너십으로, 때로는 무시하는 듯한 형의 아우라는 점이다. 한국과 캐나다 모두 미국의 말과 행동에 큰 영향을 받아왔고 또 받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미국 신화의 그늘에 존재해 왔으며 그 그늘 아래 발전해 왔다. 두 나라 모두 미국의 민주주의가 내부로부터 침식되고 있는 파트너십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캐나다와 한국 모두 변화하는 미국과 진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깨닫고 빛내야 할 때이다.

딘 울렛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부소장 / 국제협력실장)

4. 예정사항

가. 제9차 삼청포럼 (2024. 6. 13.)

제9차 삼청포럼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전망

- 2024년 6월 13일 (목) 19:00 – 20:30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19:00-20:00
발표: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전망”**
- Sydney A. Seiler
(미국 CSIS 한국 석좌, 비상임 선임고문)
※ 미국 정부에서 북한 전문가로 42년 근무

20:00-20:30
질의응답 (현장참가자)

* 본 포럼은 순차통역으로 진행됩니다.
* 사전접수
bee49@kyungnam.ac.kr / 02-3700-0843
이름 / 소속 / 직위 / 연락처
우측 QR링크 또는 E-mail로 제출 신청



시드니 사일러
(Sydney A. Seiler)

전 美 NIC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
전 주한미군 대북정보 선임 전문관
전 美 국무부 북핵 6자회담 특사
전 美 백악관 NSC
한반도·일본 담당 보좌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 2(삼청동)
TEL. 02-3700-0700
ifes@kyungnam.ac.kr
<https://ifes.kyungnam.ac.kr>



나. Fellowship 특강 및 현장 견학

- 특강 2회 (6.04. / 6.11.)
 - 1차: 최장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6.04.)
 - 2차: 이상숙(국립외교원 교수, 6.11.)
- 현장 견학 (6.13.)
 - 남북통합문화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등

다. 경남대 재학생 대상 통일심화교육 운영

- 기간: 2024. 6. 21.(금) ~ 6. 22.(토)
- 내용: 극동문제연구소 특강 후 현장견학(국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임진각 등)
- 참가자: 경남대 재학생 39명

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

- 기간: 2024. 6.27.(목) ~ 8.14.(수) / 총 48일
- 내용: 평화관 전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마. 『Asian Perspective』 발간 (2024.6월초)

- Vol.48, No.2 (Spring 2024)

바. 『한국과 국제정치』 발간 (2024.6월말)

- 제40권 제2호, 2024년 (여름) 통권 125호

5. 안내사항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가입 방법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가입신청서 제출

연회비

- 학생회원: 30,000원/일반회원: 50,000원/기관회원: 100,000원
- 개인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 기간평생회원: 300만원 이상
- 온라인 납부: 경남은행 / 570-07-0011980 / '경남대학교'

회원 혜택

- 연구소 도서관 이용
- 연구소 주최 국내외 학술회의 초청
- 연구소 발행 연구물 및 자료 제공
-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 (www.nknews.org/pro) 이용

가입 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
T. 02 3700 0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2 (03053)